

“올바른 국정감사만이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수신자 안전 행정부장관

(참조) 재정정책과장

제 목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감자료 제출요구 자제 요청

1.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자치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며, 법률상 국정감사의 범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감사자료의 요구 또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무분별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며, 국비지원이 전무하거나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속하는 자료까지도 제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저항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련 중앙부처를 경유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지방분권과 자치를 구현하고 선도하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또한 개별 국회의원의 임의적·불법적인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함은 물론 지방으로의 자료요구를 금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광역노조연합 국정감사 바로잡기 주요활동 연혁 1부. 끝.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대표



사무총장 김동찬      국감본부장 이성운      부대표 임동혁      대표 김수일

시행 광역연합 - 18      (2013. 9. 12)      접수 -      (2013. . )

우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공무원노동조합 (www.cabo.busan.kr)

전화 051-888-5622 / 010-3118-2649(국감본부장)      전송 051-888-5969      / 공개

## 광역연합의 국정감사 바로잡기 활동 연혁

- 2000년 : 국감제도 개선요구 활동 전개 (16개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 국감반대 성명발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경북, 전남)
  - 공개사과요구 성명발표 (대구시공무원직장협의회) : 대구시의 건교위 국감시 건교위원장이 공직협의 국감반대에 대한 비판 및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모독 발언관련
  -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소송 (헌법 제10조, 제37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와 권리, 지방자치권 및 공무원의 직무수행권 침해) ⇒ 지방공무원은 단순히 사실적,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각하결정
- 2001년 : 국정관련 국감제도 개선요구 활동 전개 (16개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 국회의장에게 국정감사 중지요구 공문발송 :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
  - 각 상임위원장에게 국정감사 중지요구 공문발송 : 대구시공무원직장협의회
  - 국감 종료 후 일부 방송사에서 국정감사 제도개선 관련 TV토론회 방영(서울, 부산)
- '02년 3월 : 「국가와 자치사무의 구분 및 국감의 합리적 발전방안」 연구용역(한국정치학회)
- '02. 4. 17 : 「국정감사 개선 등 21세기 지방자치발전 제2차 대토론회」 개최 (16개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 '02. 8. 26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회 등 각계에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개선 공동건의
- '02년 8월 : 전국 광역시·도공직협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전면거부 성명 발표
- '02년 9월 : 광역시·도공직협에서 각 시·도 의회에 자치단체 국감에 대한 입장표명 건의
- '02년 9월 : 국회사무처장 방문 개선요구 (16개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 '02. 9. 12 : 경기도의회에서 국정감사 제도개선 결의안 채택
- '02. 9. 13 : 박관용 국회의장 서울지점에 고발 (국감법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혐의)
  - 이후 국회의장 특별지시로 국회내에 「국정감사 개선 기획단」 설치 운영
- '02년 9월 : 국정감사 개선을 위한 백만서명운동 및 국정감사 원천봉쇄 결의
- '03년 2월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 **“감사범위는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지방고유사무 제외)
- '03년 8월 : 2003년 국정감사 공동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03년 7월 ~ 11월 : 국정감사자료 요구 시 국가사무 감축 분위기 확산

○ 2004 ~ 2008 기간 중 국정감사 16개 시도광역연합 공동대응 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상임위 및 국회의원 공문발송</li> <li>▸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항의방문(행자위, 건교위, 환노위 등)</li> <li>▸ 국정감사 거부 성명서 발표 및 국정감사장 방문 협조 요구</li> </ul> |
|---|

○ '09년 7월 : 16개 시도광역연합 국장감사 바로잡기 추진본부 발족

○ '09년 9월 : 국회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 면담

- 광역연합이 제안한 지속된 논란사항 해소를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분류 매뉴얼 제작활용 건의안에 동의, 국회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함.
- 의원들의 협조를 통해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료요구의 시정노력 추진 약속

○ '09년 9월 : 참여연대와 국감 공동감시 협의

- 국감관련 부분에 대한 지속적 공유와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공조에 협의

○ '10년 7월 :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임 사무목록 책자 발간(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편집)

○ '11년 10월 : 국정감사자료 DB사이트 구축 운영 협의(행정안전위 양당 간사)

○ '11. 10. 17 : 전국광역연합 대표 박희태 국회의장 서울지검에 고발

○ '12. 3. 5 : 행정안전위원장 명의로 각 국회의원들에게 국감자료 요구관련 안내 시행

- 국회 행안위 행정실장과 노동조합과의 공조를 통한 상황관리 약속

<p><b>국회에서 반영한 개선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의 범위 :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li> <li>○ 자료요구 방법 (<b>의원실에서의 개별요구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요구서는 제출요구일 7일전 송달)</li> </ul> </li> </ul>
-----------------------------	---

○ '12. 3. 21 : 국회의장 고발건 취하 결정(연합회의)

○ '12. 8. 2 : 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자료요구시 통일된 대응방식 이행 결의

○ '12. 8. 10 : 행안위 등 5개 상임위원장 면담, 고유사무에 대한 자료요구 자제 요청

○ '12. 9. 13 : 국감 바로잡기 홍보자료 제작(8천부) 배포 : 국회, 행안부, 시도 의회 등

○ '12. 10. 18 : 부산광역시 행안위 국감장 국감반대 시위 및 건의사항 전달

### ◀ 주요 활동 성과 ▶

-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 관심도 제고
- 지방분권 및 자치제도 수호 차원의 지자체, 지방의회에서 국정감사 반대 분위기 확산
- 시민단체에서 출발 점진적으로 주민들에게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론과 무용론 확산